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9회

자료 성격: 출제기준형 · 2026-10-03 · 문항 수: 80 · 근거 기준일: 2026-09-15

성명		점수	/ 100
----	--	----	-------

2026-09-16 전면 교체한 자체제작 예상문제. 작성 기준일 2026-09-15. 전체 정답·현행법령·의미중복 최종
검수와 시험 관리기관 직접 원본 대조는 미완료입니다. 정답·해설은 웹에서 확인하세요. 정답과 해설은
license.3001.co.kr의 같은 제목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 설비는 계약 규격대로 인수했지만, 수요분석 때 빠뜨린 현장 조건 때문에 실제 공공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가장 적절한 평가는?
 - (1) 공공서비스 활용도는 조달 평가와 무관하다.
 - (2) 조달 목적 미달은 언제나 계약상대자의 계약위반이다.
 - (3) 계약 이행의 적합성과 조달 목적의 달성은 구분해서 평가한다.
 - (4) 인수했으므로 조달 목적도 달성한 것이다.
- 아직 정부와 계약한 적은 없지만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향후 공공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기업의 지위는?
 - (1) 자동으로 낙찰자 지위를 가진다.
 - (2) 수요기관으로만 분류해야 한다.
 - (3) 잠재적 공급자로서 이해관계자에 포함될 수 있다.
 - (4) 기존 납품실적이 없으므로 시장 정책과 아무 관련이 없다.
- ㉠ 적용 법규의 집합, ㉡ 담당기관의 구조, ㉢ 실제 수요 처리 방식의 연결로 적절한 것은?
 - (1) ㉠ 운영적 체계, ㉡ 법적 체계, ㉢ 조직적 체계
 - (2) ㉠ 조직적 체계, ㉡ 운영적 체계, ㉢ 법적 체계
 - (3) ㉠ 법적 체계, ㉡ 법적 체계, ㉢ 법적 체계
 - (4) ㉠ 법적 체계, ㉡ 조직적 체계, ㉢ 운영적 체계

4. 장비 A는 구입가격이 낮지만 잦은 고장과 긴 복구시간이 예상되고, 장비 B는 구입가격이 높지만 안정성이 좋다. 비용 대비 가치(Value for Money)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1) 고가 제품일수록 가치가 높다고 보고 B를 선정한다.
- (2) 요구 성능, 사용 중 비용과 서비스 중단 영향을 함께 비교한다.
- (3) 구입가격 순위만 정한 뒤 나머지 항목은 제외한다.
- (4) 고장이 적다는 설명이 있으면 비용 자료는 비교하지 않는다.

5. 동일한 구매자료를 네 부서가 따로 재입력하느라 처리기간이 늘어났다. 법정 승인과 책임분장은 유지한다는 조건에서 효율성 개선에 가장 적합한 조치는?

- (1) 개선 전후 처리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담당자 수만 늘린다.
- (2) 부서마다 다른 항목 이름을 사용해 입력 업무를 분리한다.
- (3) 검사·승인 기록을 전부 생략하여 처리 횟수만 줄인다.
- (4) 공통 자료를 연계하여 중복 입력과 불필요한 전달 단계를 줄인다.

6. 일반경쟁의 기술사양을 작성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은?

- (1) 낙찰 후에야 필수 성능을 결정하여 참가자가 추정하게 한다.
- (2) 필요 성능 대신 담당자가 선호하는 공급자 이름만 적는다.
- (3) 여러 업체가 충족할 수 있는 성능은 모두 사양에서 제외한다.
- (4) 실제 필요한 성능과 확인방법을 명확하고 중립적으로 적는다.

7. A안은 공고한 기술요건을 충족하는 업체의 참가를 받고, B안은 발주기관이 선정해 지명한 업체를 초대한다. 두 안의 구별로 적절한 것은?

- (1) A안과 B안 모두 공급자가 한 곳뿐인 계약이다.
- (2) A안은 낙찰 후 심사이고 B안은 계약종결 심사이다.
- (3) A안은 요건을 통한 범위 제한, B안은 업체를 지명하여 참가 범위를 정한다.
- (4) A안의 기술요건은 구매 목적과 무관할수록 적절하다.

8. 적법한 수의계약 사유를 확인한 뒤 한 업체의 견적을 받았다. 경쟁가격이 직접 형성되지 않는 위험을 관리할 조치로 적절한 것은?

- (1) 시장가격·원가·유사 거래조건 등을 활용해 제시가격의 합리성을 검토한다.
- (2) 견적 금액을 공개하지 않으면 예산 초과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 (3) 견적서에 직인이 있으면 시장정보는 필요 없다.
- (4) 수의계약 사유가 있으면 제시가격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

9. 조달시스템에서 잠재 공급자를 찾고, 공급능력 정보를 비교하며, 입찰·제안요청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려 한다. 이 요구와 가장 가까운 기능은?

- (1) 사용 중인 물품의 폐기 실적만 집계하는 기능
- (2) 이미 납품된 물품의 대금 이체만 처리하는 기능
- (3) 완료된 계약의 종결문서만 보관하는 기능
- (4) 전자적 소싱을 통한 공급자 발굴·평가 지원

10. 기관이 해결되지 않은 공공서비스 문제에 관한 혁신수요와 혁신제품 시범구매 정보를 함께 살펴보려 한다. 교재상 가장 관련성이 높은 지원 플랫폼은?

- (1) 기관 직원 급여시스템
- (2) 물품의 보유수량만 기록한 내부 재고대장
- (3) 혁신장터
- (4) 공사 준공도면 개인 보관함

11.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과 조달청의 카탈로그계약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1) 심사위원회가 모든 수요기관의 실제 사용기간을 일괄 확정한다.
- (2) 디지털서비스물 등록은 서비스 선정 검토를 대신하는 개인 광고이다.
- (3) 서비스 선정·이용지원시스템 등록과 조달청 계약·전용물 등록은 구분된다.
- (4) 서비스 심사를 신청하면 모든 기관의 구매계약이 즉시 성립한다.

12. 이미 등록된 품목의 속성에 오기가 있음을 확인했다. 최초로 검토할 요청 유형은?

- (1) 해당 품목정보의 변경 요청
- (2) 상품분류와 무관한 인증서 폐기 요청
- (3) 다른 이름으로 동일 품목 신규 등록
- (4) 기관의 급여계좌 변경 요청

13. 기존 제품의 속성 오기를 바로잡는 경우와 성능이 다른 새 모델을 출시한 경우를 구분한 판단은?

- (1) 전자는 증빙을 갖춘 오류 수정, 후자는 새 품목인지 별도 검토한다.
- (2) 새 모델은 언제나 기존 모델의 식별정보를 그대로 쓴다.
- (3) 둘 다 기존 모델의 속성을 조용히 덮어쓰면 된다.
- (4) 오기 정정도 새로운 제조업체 설립이 있어야 가능하다.

14. 단순 소모품 구매에 고난도 설비사업과 같은 분량의 제안서와 과도한 재무자료를 요구하자 소규모 업체들이 참여를 포기했다. 조달목적을 유지하면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개선은?

- (1) 낮은 가격을 제시한 중소기업에는 제품 규격 확인도 면제한다.
- (2) 계약의 가치·위험에 필요한 확인자료는 유지하고,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줄인다.
- (3) 기존 거래업체에만 간소화 서식을 제공한다.
- (4) 평가자료는 줄이되 입찰자에게 계약 위험과 무관한 담보를 더 요구한다.

15.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가 중소 제조업체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로 가장 직접적인 것은?

- (1) 건설업체의 하도급적 자재구매 관계에 종속될 위험을 줄이고 공공기관과의 공급 기회를 확보한다.
- (2) 중소기업이 자재를 공급하는 대신 건설업체의 공사면허를 취득하게 한다.
- (3) 자재를 공공기관에 납품하면 제조원가와 관계없이 일정 이익을 보장한다.
- (4) 모든 공사용자재의 검사 책임을 중소기업이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16. 환경표지제품 기준을 검토하는 직원이 “환경성만 좋으면 제품별 품질기준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교재 설명에 맞는 수정은?

- (1) 환경성 기준과 함께 제품별 품질기준의 충족도 고려한다.
- (2) 환경표지는 제품 가격이 가장 낮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 (3) 품질기준만 충족하면 환경성 평가도 자동으로 통과한다.
- (4) 환경표지는 모든 사용환경에서 제품 고장이 없음을 보증한다.

17. 조달청의 시범구매 예산으로 제품을 구매하여 이를 사용할 수요기관과 연결하는 경우를 검토한다. 이 구조에서 구별해야 할 것은?

- (1) 시범구매를 집행하는 주체·재원과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는 수요기관
- (2) 시범구매 예산과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같은 회계 항목이라는 점
- (3) 제품을 사용하는 기관과 해당 제품의 특허권자는 같은 주체라는 점
- (4) 수요기관과 제품 공급자는 같은 법인으로 전환된다는 점

18. 가상 평가에서 유효한 장애인기업 자격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하되 총점순으로 낙찰자를 정한다. 담당자는 “우선구매 대상이므로 가점 계산 없이 무조건 낙찰”이라고 처리했다. 적절한 수정은?

가점의 실제 점수·대상은 출제하지 않으며 지문에 제시된 가상 평가규칙만 적용합니다.

- (1) 가점과 별도로 임의의 추가점수를 더한다.
- (2) 정해진 가점을 반영한 뒤 공고된 다른 평가항목과 낙찰기준을 함께 적용한다.
- (3) 장애인기업이면 입찰참가자격 심사를 생략한다.
- (4) 목표구매와 가점이 함께 있으므로 가점을 두 배로 한다.

19.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소 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 기관이 정책조달 관점에서 검토할 구매 접근으로 적절한 것은?

- (1) 사회적 목적이 있으므로 실제 청소 서비스의 이행 여부는 평가하지 않는다.
- (2) 취약계층 고용이라는 설명만으로 법령상 사회적기업 자격 확인을 생략한다.
- (3) 사회적기업과의 모든 거래를 용역 구매가 아닌 기부로 회계 처리한다.
- (4) 요구 서비스의 품질·이행조건과 함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적용 가능한 구매지원 제도를 검토한다.

20. 사인 간 도급에서 수급인은 아직 일을 완성하지 않았다. 도급인이 자신의 사업계획 변경 때문에 계약을 끝내려 한다. 민법 제673조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사인 간 민법상 도급의 일반 규정만을 묻습니다. 공공계약 특별규정이나 해제권 제한 특약은 없습니다.

- (1) 완성 후에도 제673조만으로 같은 해제권을 계속 행사한다.
- (2) 일 완성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3) 수급인에게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어떤 경우에도 해제할 수 없다.
- (4) 일 완성 전이면 도급인은 손해배상 문제 없이 자유롭게 끝낼 수 있다.

21. 장비 공급계약의 기본 구매액은 1억 2천만 원이고, 기관에 추가 구매 선택권 3천만 원을 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다른 항목은 없다. 선택권을 고려한 추정가격은?

추가 선택권의 행사 확률을 가중하는 문제가 아니며 수치는 가상이다.

- (1) 3천만 원
- (2) 1억 5천만 원
- (3) 1억 3천5백만 원
- (4) 1억 2천만 원

22. 법령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는 검토가 끝났다. 담당자는 청구서·승낙서 등 거래를 확인할 자료도 모두 없애려 한다. 적절한 의견은?

- (1) 생략 대상 거래에는 지급·검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2) 계약서가 없으면 법령상 허용된 거래도 모두 무효로 보아야 한다.
- (3) 계약서 생략 가능 여부와 거래 내용·이행을 입증할 자료의 확보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 (4) 계약서 생략 대상이면 계약 상대방과 목적물을 확인할 필요도 없다.

23. 계약분쟁조정 재심을 청구한 업체가 “신청서를 냈으니 해당 입찰은 이미 자동 정지됐다”고 알렸다. 교재의 분쟁조정 절차 설명에 따른 판단은?

- (1) 청구업체가 정한 정지기간이 국가와 다른 입찰자에게 바로 구속력을 갖는다.
- (2) 분쟁조정 절차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계약절차 정지를 검토할 수 없다.
- (3) 재심 청구서를 보내면 위원회의 별도 판단 없이 모든 계약이 무기한 정지된다.
- (4) 재심 청구 사실과 권한 있는 위원회의 절차 정지 조치는 구별해야 한다.

24. 조달청 대지급 대상이 아닌 조달계약에서 수요기관이 검사 후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했다. 교재의 조달사업법 제15조 설명에 맞는 후속 업무는?

- (1)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사실을 조달청에 알린다.
- (2) 이미 지급했더라도 조달청에 같은 대금을 다시 지급하도록 요청한다.
- (3) 대지급이 아니면 조달청과 연결된 계약·지급 기록을 모두 삭제한다.
- (4) 공급자가 통보하겠다고 구두로 말하면 수요기관의 관련 확인 업무가 전부 면제된다.

25. 전자조달법의 교재 인용 규정은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입찰사항을 공고하도록 정하고, 전자입찰 결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적으로 공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적절한 구별은?

제시된 조문 표현의 구별이며, 다른 법령이나 해당 기관의 별도 공개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 (1) 입찰사항의 공고 의무와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의 공고 허용 규정을 같은 표현의 의무로 바꾸어 읽지 않는다.
- (2) 결과 공고 규정이 “할 수 있다”이므로 앞선 경쟁입찰 공고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 (3) “공고할 수 있다”는 표현은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이다.
- (4) 수의계약 상대방 결정은 전자조달법상 전자입찰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관련 결과 공고도 언제나 금지된다.

26. 민간 서비스 사업자가 공개 화면을 열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 필요한 시스템 기능을 자신의 유료 서비스에 자유롭게 연결하려 한다. 적절한 판단은?

- (1) 민간은 어떤 정보도 볼 수 없으므로 공개 공고 열람도 금지된다.
- (2) 공공 시스템이면 모든 내부 기능을 조건 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3) 개발 목적이라고 주장하면 법령상 이용 제한의 검토는 면제된다.
- (4) 공개정보 열람과 전자조달시스템의 승인된 이용·활용 범위를 따로 확인한다.

27. 규칙상 구매위탁 예외 적용이 적절하게 검토되었다. 담당자가 관련 계획·입찰공고의 명시사항을 삭제하고 내부 결재만 보관하려 한다. 적절한 대응은?

- (1) 예외를 적용한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을 공고하면 공개 의무를 충족한다.
- (2) 내부에서 승인하면 대외적으로 요구되는 명시는 모두 면제된다.
- (3) 예외 적용의 이유·범위와 공개해야 할 계획·공고 사항을 해당 규정에 맞게 남긴다.
- (4) 예외 사유는 밝혀서는 안 되므로 법정 공개사항도 삭제한다.

28. 분쟁 해결안을 비교한다. ㉠ 당사자끼리 합의안을 찾음, ㉡ 제3자가 타협을 도우나 합의가 필요함, ㉢ 합의로 맡긴 중재인이 판단함. 대응하는 방식은?

- (1) ㉠ 중재, ㉡ 협상, ㉢ 조정
- (2) ㉠ 협상, ㉡ 조정, ㉢ 중재
- (3) ㉠ 조정, ㉡ 중재, ㉢ 협상
- (4) ㉠ 협상, ㉡ 중재, ㉢ 조정

29. 교재의 보증금 쟁점 사례를 적용한다. 전체 계약보증금은 2천만 원이고 일부를 검사·인수하였다. 지체상금이 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단계에서, 인수비율만큼 기준 보증금을 먼저 줄이려 한다. 교재의 설명은?

금액은 가상이며 특정 계약의 해제 여부를 확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교재 433쪽의 구별을 묻는다.

- (1) 부분 인수가 있으면 지체상금 누적 여부를 더 이상 판단할 수 없다.
- (2) 기준 보증금은 남은 납품 수량의 개수와 항상 같은 숫자이다.
- (3) 그 판단 기준과 실제 보증금 귀속액 산정에서 가분적 인수부분을 제외하는 문제를 구별한다.
- (4) 검사 없이 업체가 출고했다고 주장한 부분도 무조건 기준액에서 뺀다.

30. 교재의 MAS 사례에서 위반 납품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환수와 미이행에 대한 계약보증금 처리를 비교한다. 검토상 적절한 구별은?

- (1) 미이행 부분만 있으면 납품되지 않은 물품의 대금을 이미 수령했다고 추정한다.
- (2) 이미 납품한 위반분의 이익 환수와 미이행 부분의 보증 처리는 대상·근거가 다를 수 있다.
- (3) 두 조치에 돈이 관련되므로 같은 금액에 같은 근거를 적용하는 한 종류의 제재이다.
- (4) 물품이 납품되면 해당 납품의 허위 가격 등에 관한 환수는 개념상 불가능하다.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31. 실험용 특정 센서를 공급하는 업체가 물품 전체 구매액을 자신의 시장규모로 사용했다. 우선 개선할 분석은?

- (1) 수요기관 이름을 지우고 총금액만 남긴다.
- (2) 공사 구매액까지 합쳐 시장규모를 키운다.
- (3) 공급할 수 있는 품목과 무관하게 모든 물품공고 건수를 시장규모로 쓴다.
- (4) 실제 공급 가능한 품명·세부품명 수준으로 수요를 좁힌다.

32. 가상의 업체는 한 달에 100대를 생산할 수 있고 기존 계약에 70대가 배정되어 있다. 같은 달 신규 40대 납품을 검토한다. 잔업·외주·재고는 없다. 판단은?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 (1) 신규 40대가 총능력 100대보다 적으므로 충분하다.
- (2) 기존 70대와 신규 40대의 평균 55대만 생산하면 된다.
- (3) 총능력과 기존 배정량을 더해 170대를 공급할 수 있다.
- (4) 월 가용능력보다 10대가 부족하다.

33. 교재가 설명하는 일반적 요청방식에서, 충족해야 할 최소규격이 명확하고 적격 제품들 사이에서는 가격 비교가 핵심인 경우와 방법론의 질을 비교해야 하는 경우를 구분한 것은?

- (1) 전자는 방법론 평가만, 후자는 규격 확인 없이 최저가격만 본다.
- (2) 요청방식이 달라도 필요한 제출자료는 항상 동일하다.
- (3) 전자는 규격 충족·가격 비교, 후자는 기술제안의 질적 평가에 중점을 둔다.
- (4) 두 경우 모두 제출업체의 회사 규모만 평가한다.

34. 독점적 기술의 보호기간 종료 후 적격 신규 공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분석에 반영할 변화로 적절한 것은?

- (1) 보호기간 종료만으로 모든 신규 업체의 품질을 같다고 본다.
- (2) 진입장벽 변화에 따른 경쟁강도와 공급대안 변화를 검토한다.
- (3) 기존 업체의 점유율이 영구히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 (4) 신규 공급자가 늘면 대체 공급 가능성은 항상 줄어든다.

35. 일반 생산조건으로 산정한 견적에 납기 절반 단축 요구가 추가되었다. 원가 분석에서 우선 확인할 것은?

- (1) 잔업·급행운송 등 일정 단축으로 추가되는 비용과 실행 가능성
- (2) 추가비용은 낙찰 후 자동 가산된다고 전제한다.
- (3) 납기가 짧아지면 총원가가 언제나 비례해 감소한다고 본다.
- (4) 정상납기 견적을 근거 확인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

36. 매년 4분기에 같은 품목의 구매가 집중된다. 공급계획에 활용할 분석으로 적절한 것은?

- (1) 여러 해의 월별 실적을 비교해 반복성 및 예외 요인을 확인한다.
- (2) 한 해 4분기 실적으로 모든 미래 물량을 확정한다.
- (3) 연간 합계만 남기고 월별 자료를 모두 버린다.
- (4) 월별 주문을 발생 순서와 무관하게 섞는다.

37. 기관은 유지관리 가능 지역·응답시간·기술규격을 물었는데 업체는 연혁과 광고만 길게 제출했다. 가장 필요한 수정은?

- (1) 비교가 어렵도록 질문 순서를 모두 없앤다.
- (2) 요청한 유지관리 조건을 누락하고 유명 고객 로고만 넣는다.
- (3) 질문별 답변과 관련 근거를 먼저 배치하고 불필요한 홍보를 줄인다.
- (4) 광고 분량을 두 배로 늘려 질문을 덮는다.

38. 공개 과업이 '품질 높은 보고서 제출'이라고만 되어 있고 주제·범위·필수 결과물이 없다. 우선 제시할 보완 의견은?

- (1) 품질이라는 단어가 있으므로 구체화할 필요가 없다.
- (2) 검토 범위와 산출물 구성·완료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한다.
- (3) 업체가 원하는 분량이면 어떤 주제도 완료로 본다.
- (4) 일단 최저가격만 제시하고 결과물은 계약 후 처음 논의한다.

39. 업체가 두 가지 규격을 문제 삼았고 기관은 하나만 수정했다. 후속 대응으로 적절한 것은?

- (1) 일부 수정이 있었으므로 두 항목 모두 수용된 것으로 본다.
- (2) 원래 의견서의 희망안을 확정 규격처럼 사용한다.
- (3) 일부만 수용되었으므로 수정된 내용도 효력이 없다고 본다.
- (4) 수정된 부분과 남은 쟁점을 구분하고 잔여 사유·답변을 확인한다.

40. 기관이 규격서 V1을 V2로 정정했지만 업체의 생산팀은 V1, 견적팀은 V2를 사용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가장 필요한 관리자료는?

- (1) 업체 직원들의 개인적인 선호 규격을 모은 표이다.
- (2) 정정일을 지우고 두 파일의 제목만 같게 한 자료이다.
- (3) V1과 V2의 수치를 모두 더한 규격서이다.
- (4) 정정 공고번호·개정일·변경항목·적용 버전을 연결한 변경대조표이다.

41. 국가계약 입찰에서 보증금 면제대상이 아니며 법령상 인정되는 보증서 제출로 납부하려 한다. 업체 대표가 직접 작성한 “당사는 지급능력이 충분하다”는 확인서만 제출했다. 적절한 판단은?

- (1) 법령이 보증서를 허용해도 현금 외 납부는 전부 불가능하다.
- (2) 그 자체확인서만으로 법령이 정한 기관의 지급보증서 등 인정된 납부수단을 대신할 수 없다.
- (3) 대표가 서명하면 금융기관의 지급보증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 (4) 회사 규모가 크면 보증서 적합성 검토는 생략된다.

42. 설명회에서 담당자가 구두로 A규격을 언급했으나 이후 공식 회의록과 정정문은 B규격을 확정했다. 다른 충돌 규정은 없고 정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제안서 작성의 기준은?

공식 정정의 권한·적법성과 유효본 B가 문제에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 (1) 공식적으로 확정·배포된 B규격을 반영하고 변경 기록을 보관한다.
- (2) 현장에 직접 들었던 A규격을 계속 적용한다.
- (3) A와 B 중 업체 원가가 더 낮은 규격을 고른다.
- (4) 구두 답변과 서면 정정의 평균 성능으로 작성한다.

43. 한 입찰에서 A의 입찰서만 명확한 무효사유로 제외되었고 B·C의 유효한 입찰은 해당 절차의 성립·선정 요건을 충족한다. 정확한 상태 기록은?

B·C로 입찰 성립과 후속선정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 (1) 유효 입찰이 남으면 A의 무효사유도 자동 소멸한다.
- (2) 입찰서 하나가 무효이면 사업 전체는 항상 유찰이다.
- (3) A의 입찰무효와 사업 전체의 유찰 여부를 구분하고 B·C에 대한 절차를 적용한다.
- (4) A의 입찰가격을 B의 입찰가격에 더해 평가한다.

44. 경쟁입찰의 낙찰자 확정을 앞두고 계약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받았다. 이 사례의 내부 규정은 위원회를 자문기관으로 정하고, 계약부서가 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 사실과 이유를 기록하도록 한다. 적절한 처리는?

문항에 제시한 자문기관 성격과 기록의무를 적용한다. 모든 기관의 위원회를 자문기관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 (1) 자문위원회에 의견을 구했으면 계약부서는 최종 검토를 할 필요가 없다.
- (2) 의견의 자문적 성격을 확인하고, 채택하지 않을 경우 권한 있는 부서의 판단과 불수용 이유를 기록한다.
- (3) 모든 계약심사위원회의 의견은 기관 규정과 무관하게 동일한 구속력을 가진다.
- (4) 자문기관이라는 이유로 의견서 자체를 폐기하여 검토 흔적을 없앤다.

45. 우선협상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가 협상 전에 납품을 시작하고 계약금액이 확정되었다고 주장한다. 선정 단계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 (1) 통보 순간 업체가 원하는 계약금액이 확정된다.
- (2) 우선협상대상자는 협상 과정의 모든 요구사항을 삭제할 수 있다.
- (3) 다른 경쟁업체와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정할 권한을 받은 것이다.
- (4) 우선 협상할 순위가 정해진 것이며, 협상 성립과 계약 체결은 별도 단계로 남아 있다.

46. 가상 협상에서 법령·예산상 허용되는 범위의 과업 조정이 승인되었다. 원 제안가격 9,000만 원에서 제외 과업 700만 원을 빼고 추가 과업 400만 원을 더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세금 기준이고 다른 조정이 없을 때 금액은?

학습용 가상 사례입니다. 과업 변경과 산정방식은 적법하게 승인되었고 예산 범위 안이며 세금 기준은 같습니다.

- (1) 10,100만 원
- (2) 8,300만 원
- (3) 8,700만 원
- (4) 9,400만 원

47. 가상 적격심사는 공동수급체의 완료 프로젝트 수를 중복 없이 센다. 구성원 A가 낸 프로젝트는 가·나·다, B는 나·다·라이다. 인정하는 서로 다른 프로젝트 수는?

단순 프로젝트 수의 중복 배제만 묻고 실제 지분별 실적인정방식은 다루지 않습니다.

- (1) 4개이다.
- (2) 2개이다.
- (3) 6개이다.
- (4) 3개이다.

48.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되었다. 교재가 설명하는 후속 처리의 방향으로 적절한 것은?

- (1) 기술기준에 미달한 업체를 별도 검토 없이 적격자로 바꾸어 계약한다.
- (2) 적용 기준에 따른 재공고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요구조건과 결렬 원인도 점검한다.
- (3) 결렬 사실을 지우고 첫 업체와 합의한 것으로 평가기록을 변경한다.
- (4)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와 법적 근거 확인 없이 곧바로 계약한다.

49. 확정 평가표상 낙찰대상은 법인 A이지만 통보서 초안에는 이름이 비슷한 별개 법인 B의 등록번호가 들어갔다. 발송 전에 해야 할 것은?

- (1) B가 먼저 수락하면 평가결과를 B로 바꾼다.
- (2) 업체명만 맞추고 등록번호는 다른 법인의 것을 유지한다.
- (3) 상호가 비슷하므로 둘 중 어느 업체에 통보해도 같다.
- (4) 평가대상·사업자 식별정보·승인내용과 통보서를 대조해 잘못된 상대자 표시를 수정한다.

50. 평가위원 한 명의 점수가 다른 위원들보다 낮았다. 업체가 점수 차이만으로 그 위원의 부정행위를 확정하려 한다. 적절한 분석은?

- (1) 낮은 점수는 어떤 기준에서도 조사할 수 없다.
- (2) 점수 분포는 추가 검토의 단서로 보고, 기준 적용·기록·구체적 부정 정황을 확인한다.
- (3) 업체가 그 점수를 최고점으로 바꿔 재합산한다.
- (4) 평균과 다른 점수는 모두 불법이다.

공공계약관리

51. 장비 계약은 “기관의 지정 창고 인도 전 운송·보관 위험은 공급자, 적법한 인도 후 보관 위험은 기관이 부담한다”고 유효하게 정했다. 담당자가 이 조항을 계약 검토표에 분류할 때 적절한 항목은?

해당 위험배분 약정의 유효성은 인정되며, 개별 법률의 위험부담 기본규칙을 일반화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 (1) 소유권 이전과 관계없이 모든 위험을 영구히 공급자에게 두는 조항
- (2) 이행 과정의 사고 위험을 시점·구간별로 배분하는 조항
- (3) 입찰 참가업체의 순위를 결정하는 낙찰배점 조항
- (4) 일정한 사고가 나면 책임 심사 없이 계약을 소급 무효로 하는 조항

52. 하루에 조립 12대, 성능시험 8대, 포장 15대를 처리할 수 있다. 모든 제품은 세 공정을 거쳐야 하고 시험설비 추가나 외주 없이 안정적으로 반복 생산한다. 하루 완성품 출하능력을 늘리려면 먼저 검토할 병목은?

가상 생산모형이며 재작업·가동 중단·초기 재공품 변동은 없습니다.

- (1) 하루 12대를 처리하는 조립 공정
- (2) 하루 8대 처리 가능한 성능시험 공정
- (3) 세 공정의 평균인 약 11.7대를 새로운 병목으로 본다.
- (4) 하루 15대를 처리하는 포장 공정

53. 교재가 설명하는 물가변동 조정 원칙을 적용하는 계약이다. 첫 조정에 지수조정률을 적용했는데 두 번째 조정에서는 업체에 더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품목조정률로 바꾸려 한다. 적절한 검토는?

교재가 제시한 조정방식 유지 원칙을 묻습니다. 예외 적용 여부와 현행 예규 전체의 최종 검토는 별도입니다.

- (1) 두 방식의 조정액을 모두 더해 지급한다.
- (2) 유리한 결과만을 이유로 방식을 바꾸지 않고 기적용한 조정방식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 (3) 매번 업체에 가장 유리한 방식을 골라야 동일한 이익이 보장된다.
- (4) 이전 조정이 지수방식이었으므로 이후에는 물가변동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54. 계약담당자가 공급자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뒤 “해지했으니 입찰참가자격 제한도 같은 통지로 자동 확정된다”고 보고했다. 적절한 검토는?

- (1) 계약 해지가 적법하면 손해·보증·제재의 모든 검토가 끝난다.
- (2) 계약 해지의 효력과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별도 요건·처분 절차를 구분한다.
- (3)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검토하면 이미 발생한 계약상 청구권은 소멸한다.
- (4) 사법상 계약 해지를 통지하면 행정제재 기간도 자동 결정된다.

55. 불이행으로 발생한 대체 조달 추가비 300만 원이 손해목록 A에 적혀 있다. 같은 지출 영수증 300만 원을 목록 B의 긴급구매비에도 다시 넣었다. 다른 손해가 없는 상황에서 금액 검토로 적절한 것은?

두 항목은 동일한 영수증의 동일 지출이고 별도 손해나 약정 위약금은 없습니다.

- (1) 항목명이 다르므로 600만 원 전부를 독립 손해로 합산한다.
- (2) 중복 기재가 하나 있으면 실제 발생한 손해도 전부 0원으로 본다.
- (3) 기관이 지출했으므로 원인과 관계없이 모두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한다.
- (4) 같은 지출인지 대조하여 중복 부분을 제거하고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56. 동일 업체가 ㉠ 계약상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와 ㉡ 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취소 요구를 함께 제기하려 한다. 절차 선택의 출발점으로 적절한 것은?

- (1) ㉠ 계약상 채권 분쟁과 ㉡ 행정처분 불복의 성격을 구분하여 관할·절차를 검토한다.
- (2) 상대방이 공공기관이면 두 쟁점 모두 같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이다.
- (3) 대금 청구서를 접수하면 제재처분의 불복기간도 자동 연장된다.
- (4) 한 계약에서 시작된 분쟁이므로 어느 한 청구만 제기할 수 있다.

57. 계약은 핵심기능 전수시험을 요구한다. 현장 담당자가 검사 편의를 위해 몇 개만 시험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검사 면제·방법 변경에 대한 권한 있는 결정은 없다. 적절한 판단은?

- (1) 납기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면 담당자 의견만으로 검사조건을 변경한다.
- (2) 표본 하나가 정상이라면 전수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기록한다.
- (3) 편의상 의견만으로 전수시험 의무를 표본시험으로 바꿔 처리하지 않는다.
- (4) 계약상대자가 동의하면 기관의 내부 권한 확인은 필요 없다.

58. 공급중단 위험 X와 Y의 발생확률과 중단 하루당 영향은 같다. X는 복구까지 1일, Y는 5일이 걸릴 것으로 분석되었고 다른 영향 차이는 없다. 두 위험을 “확률과 하루 피해가 같으므로 동일하다”고 평가했다. 보완할 판단요소는?

1일과 5일은 가상 예측이며 지속기간 이외의 조건은 같습니다.

- (1) 복구기간은 위험이 실제 발생한 뒤에만 생각할 수 있어 계획에 쓸 수 없다.
- (2) 하루당 영향이 같으면 계약기간 전체가 자동 연장된다.
- (3) 발생확률이 같으면 복구기간 자료를 평가에서 제거한다.
- (4) 중단의 지속기간을 반영해 누적 영향을 비교해야 한다.

59. 분할 납품 계약의 이번 청구 목록에 이미 지난달 지급한 일련번호 101~110 제품이 다시 포함되어 있다. 업체는 이번 청구서 번호가 새롭다고 설명한다. 적절한 검토는?

- (1) 전체 납품이 끝나기 전에는 기지급 내역과 비교할 수 없다.
- (2) 청구서 번호뿐 아니라 납품물·검사·기지급 내역을 연결해 중복분을 확인한다.
- (3) 새 청구서 번호가 있으면 기존 납품분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 (4) 중복 가능성이 있으면 적법하게 새로 납품한 물품도 영구 미지급 처리한다.

60. 적용 계약은 하자 시 보수 또는 대체납품 등의 조치를 정하고 있다. 조치 A는 기존 장비의 결함 부품을 수리하여 적합하게 만드는 것이고, B는 결함 장비 대신 적합한 새 장비를 공급하는 것이다. 바른 구별은?

- (1) A는 계약보증금 반환, B는 입찰 취소이다.
- (2) A와 B는 모두 가격을 깎고 결함품을 그대로 쓰는 감액 처리이다.
- (3) B는 제품이 새것이므로 별도 규격 확인이 언제나 면제된다.
- (4) A는 하자보수, B는 대체납품이다.

61. 공고문이 “계약특수조건은 별도 자료 참조”라고만 적고 자료의 열람·교부 경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입찰자가 계약조건을 파악할 수 있게 하려면?

- (1) 자료가 기관 내부에 존재하기만 하면 참가자 접근 경로는 필요 없다.
- (2) 조건문서는 낙찰자에게만 처음 공개하면 충분하다.
- (3) 적용할 조건문서의 식별정보와 실제 접근 가능한 열람·교부 경로를 공고에 연결한다.
- (4) 공고 제목을 길게 작성하면 별도 조건문서의 열람을 대신한다.

62. 기관이 장비 낙찰가격 비교에 구입가격과 전력비를 함께 반영하려 한다. 업체들이 견적을 낸 뒤 특정 업체에 유리한 사용시간과 전력단가를 선택하려 한다. 적절한 방식은?

- (1) 평가에 사용할 운영기간·사용조건·단가와 계산방법을 사전에 명확히 하고 동일하게 적용한다.
- (2) 전력비는 미래 비용이므로 어떤 가정을 써도 평가 순위에 문제가 없다.
- (3) 최저 구입가격 업체만 운영비를 0원으로 평가한다.
- (4) 실제 계산은 개찰 후 정하되 종합평가라는 명칭만 미리 공고한다.

63. 전자 견적 절차가 서로 다른 업체 2인 이상의 견적을 요구한다. 담당자는 A업체가 제출한 최초 견적과 수정 견적 두 파일을 근거로 “2인 이상 견적 확보”라고 기록했다. B 등 다른 업체의 견적은 없다. 적절한 검토는?

이 사례에는 2인 이상 견적 요건의 면제·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 문서가 두 개여도 제출자는 A 한 업체이므로 2인 이상의 견적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 (2) 같은 업체라도 파일명이 다르면 각각 다른 견적 제출자로 센다.
- (3) 수정 견적이 더 저렴하면 제출자 수 요건도 자동 충족한다.
- (4) 최초 견적과 수정 견적을 서로 경쟁한 두 업체 가격으로 순위를 매긴다.

64. 품질관리 활동 ㉠ 구매규격의 적정성 검토, ㉡ 생산 중 공정 품질점검, ㉢ 납품 후 불량 신고와 대체 조치를 배치하려 한다. 적절한 연결은?

- (1) ㉠ 사전 예방, ㉡ 이행 중 관리, ㉢ 사후관리
- (2) ㉢을 했으면 ㉠과 ㉡의 누락은 항상 문제되지 않는다.
- (3) ㉠ 사후관리, ㉡ 입찰서 제출, ㉢ 사전규격 공개
- (4) 세 활동 모두 최종 대금 지급만을 뜻한다.

65. 가상 물품계약은 장비 40대에 해당 25만 원이다. 적법한 변경계약으로 수량을 34대로 줄이고 단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른 항목·세금 차이는 없다. 변경 후 계약금액은?

수량 변경과 단가 유지가 유효하게 합의된 가상 사례입니다.

- (1) 625만 원
- (2) 850만 원
- (3) 150만 원
- (4) 1,000만 원

66. 가상 점검 공고는 “12개 시설에 시설별 4회 점검, 점검 1회는 시설 1곳 방문”으로 과업량을 정했다. 제안가격을 산정할 때 반영할 총 점검 횟수는?

시설 수와 횟수는 가상이며 현장 간 이동비 등 추가비용을 묻지 않는다.

- (1) 48회
- (2) 12회
- (3) 4회
- (4) 16회

67. 제안서가 비용 절감을 장점으로 내세우지만 계산 근거는 필수 보안점검과 정기교육을 빼는 것이다. 검토 의견으로 적절한 것은?

- (1) 총액이 낮아졌으면 과업 누락도 언제나 적절한 원가 절감이다.
- (2) 필수 과업을 유지하면서 얻는 효율화와 의무 누락으로 낮아진 비용을 구별한다.
- (3) 원가절감 항목이 있으면 어떤 개선안도 제안할 수 없다.
- (4) 필수 업무가 빠졌어도 제안서 표지에 “전 범위”라고 쓰면 충족된다.

68. 평가위원이 사업수행계획에 중간 점수를 주면서 이유를 “그저 보통”이라고만 썼다. 평가항목에 연결되는 기록으로 더 적절한 것은?

- (1) 제안서의 일정·인력·지원체계 중 확인된 강점과 부족한 근거를 관련 부분과 함께 적는다.
- (2) 점수를 정했으면 어떤 근거도 남길 필요가 없다.
- (3) 다른 위원의 점수를 베껴 적으면 자기 판단 근거도 자동 성립한다.
- (4) 업체 이름이 익숙한지를 적고 해당 계획 내용은 남기지 않는다.

69. 교재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입찰가격 표를 찾아본다. 두 소프트웨어 사업의 규모는 같지만 하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이고 다른 하나는 비대상이다. “소프트웨어이고 규모가 같으니 표의 같은 행을 적용하면 된다”는 검토에 대한 보완은?

2026년6월 교재 표21의 분류구조에 관한 문제이다. 실제 심사는 적용일의 현행 세부기준을 별도로 확인한다.

- (1) 소프트웨어 사업에는 가격평가 행이 제시되지 않는다.
- (2) 평가 행은 업체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유롭게 고른다.
- (3) 소프트웨어라는 명칭과 규모 외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평가 행을 선택한다.
- (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부는 제품 구매 때만 확인하므로 이 표에서는 무시한다.

70. MAS에 등록된 클라우드 연계 장비가 기관 내부 보안요건과 호환되는지 아직 확인하지 않았다. 담당자는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호환 검토를 생략하려 한다. 적절한 판단은?

- (1) 구매 후 호환이 안 되면 기관 요구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2) 쇼핑몰에 등록되면 모든 기관의 서로 다른 내부 보안정책도 자동 충족한다.
- (3) 기관별 검토가 필요하면 MAS를 통한 구매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 (4) 등록 계약의 적정성과 이번 기관 환경에서의 기능·호환 요구 충족을 별도로 확인한다.

71. 신규 물품의 MAS 추진 검토에서 공급 가능 업체 수는 확인했지만 업계 공통 규격과 시험기준은 조사하지 않았다. 필요한 보완은?

- (1) 규격이 있으면 업체 수 관련 요건은 어떤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 (2) 한 업체의 광고 문구만 있으면 업계 공통 규격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 (3) 업체가 여러 곳이면 서로 비교할 규격이나 시험기준은 필요 없다.
- (4) 업체 수 관련 요건과 상용 규격·시험기준 관련 요건을 각각 확인한다.

72. 2단계경쟁 평가가 끝난 뒤 두 사유가 제기됐다. ㉠ 공개된 산식의 입력 오류 발견, ㉡ 담당자가 결과 업체를 개인적으로 선호하지 않음. 적절한 구별은?

- (1) 평가가 끝났으므로 확인된 계산 오류도 기록할 수 없다.
- (2) 둘 다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는 뜻이므로 동일한 재평가 사유이다.
- (3) ㉠은 근거를 확인해 정정 절차를 검토하고, ㉡만으로 결과를 임의 취소하지 않는다.
- (4) 선호하는 업체가 나올 때까지 동일 평가를 반복한다.

73. 업체가 만족한 고객 3곳의 감사편지만 제출하며 그 자료로 전체 계약이행실적 평가를 대체해 달라고 한다. 적절한 검토는?

- (1) 업체가 골라 낸 긍정적 사례만 있으면 모든 거래의 품질도 동일하게 확정된다.
- (2) 계약 건수가 많으면 납기 기록이나 평가대상 기간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 (3) 정해진 시스템의 거래·이행 자료와 평가 기준을 우선 확인하고 선별된 추천과 구분한다.
- (4) 고객 의견은 어떤 평가에도 참고될 수 없으므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74. 기관 A가 건설업체 B와 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B가 공사의 일부를 업체 C에 맡기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기본적인 계약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1) B와 C의 계약이 생기면 A와 B의 계약은 자동 소멸한다.
- (2) C가 현장에서 작업하므로 A와 C가 원도급 관계로 자동 변경된다.
- (3) A와 B는 원도급 관계이고 B와 C는 하도급 관계이다.
- (4) A가 공공기관이면 B와 C 사이의 계약은 존재할 수 없다.

75. 새 공공시설 사업에서 필요성·대안·재원 조달 가능성이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 곧바로 세부 시공도면 작성과 시공계약 체결을 확정하려 한다. 일반적인 사업준비의 보완 방향은?

- (1) 사업비가 작든 크든 모든 사전 검토의 종류·면제는 동일하다고 본다.
- (2) 시공계약을 먼저 체결하면 재원 조달 가능성 검토를 생략한다.
- (3) 세부 도면이 완성되면 사업의 필요성과 대안도 자동 입증된다.
- (4) 사업 필요성·타당성과 기본계획을 검토한 뒤 그 결과에 맞춰 설계를 구체화한다.

76. 가상 공고는 공종별 분담 이행 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구성원별 분담 공종과 자격을 요구한다. 제출한 협정서는 지분율만 있고 누가 어느 공종을 수행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보완 검토는?

분담 이행 허용과 요구 자료가 유효한 가상 공고입니다.

- (1)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면 공고에 없는 방식도 자동 허용된다.
- (2) 대표자 이름만 있으면 다른 구성원의 수행 공종과 자격은 확인하지 않는다.
- (3) 공고가 허용한 공동수급 방식에 맞춰 분담 공종·수행자·자격이 연결되는지 확인한다.
- (4) 지분율 합계가 100%이면 어떤 공동수급 방식의 자료든 모두 충족한다.

77. 기관이 일정한 공사금액을 확정하여 제시하고 그 범위에서 더 우수한 설계를 경쟁시키려 한다. 교재가 소개한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의 판단 초점은?

- (1) 확정된 가격조건 아래 설계의 우수성을 비교한다.
- (2) 설계평가는 하지 않고 임의로 낮춘 가격만 비교한다.
- (3) 설계점수는 같게 두고 업체의 제출순서만 비교한다.
- (4) 확정가격 방식이면 설계의 계약 요구조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

78. 가상 설계변경 규칙은 기존 비목의 증가물량에 원칙적으로 계약단가를 적용하되,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으면 예정가격 단가를 적용한다. 증가 10단위, 계약단가 20만 원, 예정가격 단가 18만 원이다. 다른 예외가 없을 때 증액은?

교재에 제시된 기본 구조를 지문 규칙으로 정했습니다. 표준시장단가·발주자 요구 등 별도 방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180만 원이다.
- (2) 20만 원이다.
- (3) 190만 원이다.
- (4) 200만 원이다.

79. 종합심사의 안전 관련 자료를 검토한다. 업체가 사고사망 지표가 낮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 기록은 평가자료에서 빼도 된다고 주장한다. 교재의 평가항목 설명에 맞는 검토는?

실제 배점·감점 크기는 묻지 않고 서로 다른 평가요소의 구별을 다룹니다.

- (1) 보고 위반을 확인했으므로 시공실적 금액을 모두 0으로 고친다.
- (2) 보고의무 위반은 낮은 입찰가격으로 자동 소멸한다.
- (3) 사고 지표가 낮으면 보고의무 위반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처리한다.
- (4) 사고 관련 지표와 보고의무 위반 여부는 구별하여 해당 기준에 따라 함께 확인한다.

80. 시공 중 승인된 설비 배관 경로 변경이 있었는데 인계자료는 최초 설계도면뿐이다. 운영부서는 누수 발생 시 실제 차단밸브 위치를 찾기 어렵다. 인계에서 필요한 보완은?

- (1) 승인된 변경이므로 운영부서는 변경내용을 몰라도 된다.
- (2)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면 도면·매뉴얼 등 문서 인계는 모두 불필요하다.
- (3) 실제 시공 상태를 반영한 준공도면과 관련 운전·유지관리 정보를 인계한다.
- (4) 최초 설계가 기준이므로 준공도면에도 변경 전 경로만 남긴다.

답안 기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